

투데이 칼럼

미얀마 사태와 미중 전략

2021년 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 첫 방문국은 미얀마였다. 그는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흘라잉을 만났다. 그리고 불과 3주가 안 돼 미얀마에서 흘라잉이 주도한 쿠데타가 일어났다. 왕이 외교부장은 쿠데타 직전 정부의 핵심 인물을 만난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배후설'마저 제기되었다. 급기야 왕이 부장이 입장을 밝혔다. 정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얀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얀마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필수적인 접경 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과 해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연결망을 구축해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다. 중국은 내륙 원안성 톈징에서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를 거쳐 서부 벵골만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도시 차우크류와 양곤까지 철로 사업을 하고 있다.

송유관도 함께 깔고 있다. 이는 미얀마를 도약대로 인도, 아프리카, 유럽까지 진출하는 바닷길을 열게 된다. 미 해군이 주도권을 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Quad)라는 안보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인도양과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을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포위해 견제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미얀마 서부 벵골만에 항공모함을 정박시키게 되면 미국은 물론 벵골만 건너편 인도에도 군사적 위협이 된다. 쿼드의 고리도 끊길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충돌에 대해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레이트 게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패권 대결이다.

이는 러일전쟁으로 일단락을 맺었으나 여파가 동북아시아까지 번지면 서 한국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인도양과 태평양 일대의 국가들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쿼드' 참여 등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첫 무대로 미얀마가 부상했다. 미국은 동

맹 강화를 내건 마방이라 미얀마 사태를 좌시하기 어렵다. 중국이 인도 알바다까지 치고 나오면서 미국과 인도를 이어주는 '고리'가 끊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쿠데타 이전 미얀마의 정치 상황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인 성과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자부하던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모델이 바로 미얀마였다. 미국은 직접 제재와 다자 기구 활용 등을 통해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려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부는 즉각 권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산하 은행에 예치된 10억 달러 규모의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 인출을 차단했다. 하지만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나 교역액은 많지 않다.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을 통한 해결도 모색하지만 쉽지 않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미얀마가 속한 역내 다자기구,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의 역할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하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독재국가나 왕정이어서 오히려 미얀마 '민주화 바람'을 우려한다.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들이 계속 버티고 국제 사회가 지속적인 지원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은 민주화 내비호파를 우려할 수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얀마 사태 소식을 전하며 다루지 않고 있다.

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이어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의 범민주 진영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미얀마의 인도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힘의 논리가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의 형태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 부상을 견제하다 충돌한다는 '루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형국이다. 이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될 수 있다.

독자제언

급출발·급가속·급정차 피하는 안전운전을

마리톤 경기에 참가하는 달린이들은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워밍업을 하고 출발하면 단백질을 태우며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달린다.

출발과 동시에 고속 질주를 하면 과부하가 걸려 오버 페이스가 되며 결국 페이스가 떨어지고 원하는 페이스를 펼칠 수가 없게 된다.

운전자들이라면 급출발로 시동이 꺼진 경험과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급가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급출발은 급가속으로 이어져 운전자나 주변에서 운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차동차를 빠

른 속도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소비량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앞차의 돌발 상황에 따른 급정차 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RPM 2,000이하로 가도록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하며, 경제속도인 60~80km로 주행하고, 급정차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켈터키대학병원, 폭발물 탐지 로봇 작동하는 경찰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켈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켈터키대학 쉐들러 병원에 총기와 폭발물로 무장한 남성이 방문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발물 탐지 로봇을 작동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총기, 폭발물을 소지하고 방탄복을 착용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나올 때 체포했으며 별다른 사고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 응급실 주변을 폐쇄하고 학생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사설

북한의 간척사업

북한 곳곳에서 대대적인 간척 사업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간척사업은 식량난과 직결되어 있다. 농토를 늘려 식량 증산에 나선 것이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심각하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는 식량난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해 피해도 엄청났다.

북한 당국은 바다와 갯벌을 농경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버려진 땅을 찾아 국토 면적을 넓히는 이른바 '새 땅 찾기'에도 본격 나섰다.

요즘 평안남도 온천군의 안석 간척지에는 흙과 돌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향하고 있다.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간척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평안북도의 흥건도 간척지, 평안남도의 안석 간척지, 황해남도의 용매도 간척지 3구역과 4구역 등이다.

북한 당국은 간척사업에 총공격을 벌여야 한다며 일꾼들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모든 역량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마감 단계 장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목표를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전체 국토 면적의 8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그만큼 농경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1958년 당시 김일성 주석 지시로 압록강 하구 5개 섬을 연결하는 간척사업을 시작해 비단섬을 만들었다.

2010년 완공된 평안북도 대계도 간척지 매립 사업도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 간척사업이다. 비단섬과 대계도가 농경지와 양어장 등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 최근 북한 매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곳에서 많은 알곡을 수확하여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식량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새로 확보한 국토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17배에 달한다.

민주 이원택 의원과 농어민위원회

전국 농어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원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국회의원)에 커는 기대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이원택 위원장은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25만 농어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농어민위원회의 움직임은 정부의 농정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농지제도 개편과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추가 경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 등에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1,247억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 의결했다.

연·근해 어업 '이중조업구역' 재조정 문제를 해결해 전북지역 어민들의 조업 면적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북 해역 연안자랑어업과 근해통발어업 간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민위원회는 위

원장과 29명의 부위원장 등 3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모두 농업·먹거리·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 경기 예산 안에는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졌다.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작물의 자급률을 일시에 높이는 어려운 것이다. 우선 농민이 안심하고 재배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비축 계획에 맞춰 지은 저장 시설 확충도 절실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제도 하점이 드러났다. 농지법 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신규 취득 면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농지는행 가능 확대도 중요하다. 이원택 위원장은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